



한국환경자원공사

주요업무 추진계획

1. 내부역량 강화 및 고객경영체계 확립

- 공사 비전 및 추진전략 실행에 직원의 역량을 집중화 할 수 있도록 업무수요에 적절한 인력구조 확립
- 기능이 축소되는 업무영역의 직원을 신규사업 수행 인력으로 전환배치하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
-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급위주의 인력운영체계에 서 탈피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체계 정착
- 전사적 혁신 체질화를 통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공사위상 확립
-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정기적으로 측정·분석하여 고객정보가 정책결정 및 집행에 반영될 수 있는 전략적 고객정보시스템 구축
- 반부패·윤리경영 추진활동을 전체 경영혁신 실적과 유기적으로 연계, 강화하여 고객의 신뢰 확보
- 상황별, 직무별 실천행동 가이드를 구축·실행하는 등 윤리강령을 구체화하고 실천력을 강화
- 공사업무의 기획단계부터 홍보강화 등 열린 행정 실행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고객의견 적극 수렴
-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결과 산업지원부문 16개 기관중 4위, 혁신수준진단결과 상위 15% 이

내 등 그간 혁신성과를 상향달성 추진

2. 폐기물관리정책 및 제도지원 인프라 구축

- 자원순환형 자원관리체제로의 개편을 위한 자원순환촉진법 제정 지원
- 「자원순환 사회형성을 위한 국가비전 및 청사진 마련」 연구용역 착수(2005년 12월 ~ 2006년 11월,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)
- 국가차원의 천연자원, 에너지, 폐자원 등에 대한 순환 이용율을 파악하고 중·장기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
- 폐기물 종합관리기관으로서 역량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 신규제도의 안정적 도입
- 제품의 환경정보장제 도입을 위한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정지원 및 관리시스템 구축(2007.7월 시행)
- PCBs를 함유한 폐변압기의 수거·보관 및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대책수립(2005년 12월부터 T/F구성 운영중, 환경부)
- 생활폐기물의 32%(부패기준 50%)를 차지하는 포장

-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을 위한 포장기준 검사·표시제도 도입 지원(2007년 시행예정)
- 폐기물관리정책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국제정책연구센터 기능강화
- 국가간 정부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규범 및 협약의 증가추세에 따른 국가간 협상 및 분쟁발생에 중간조정 역할수행
- 폐기물정책 품질제고를 위해 국제환경협력 인력풀 운영을 활성화하여 각종 국제세미나 및 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 및 지원
- 해외사무소 기능강화를 통해 국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폐기물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중심역할 수행

목표 2. 재활용산업융합육성체계 구축

1.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 대책 수립

- 재활용산업 전반에 대한 대·내외의 여건 등을 종합 분석하여 발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(5개분야 32개 과제)를 선정하고 추진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(2006년 6월)
- ① 산업활성화 기반 마련 (제도개선 및 특별법 도입)
 - 자원순환 촉진 폐기물관련 법제 종합정비
 - 재활용산업 육성지원 특별법 도입
 - 산업규제 일제정비 및 민·관 협력체계 구축
 - 폐기물관리 조직역량 강화(중앙·지자체 조직개편)
 - 수거·처리시스템의 시장 친화적 개선
 - 폐기물처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지원
 - 환경세 도입 등 투자지원 확보
 - 환경성보장제, 포장재 사전 검사·표시제 시행
- ② 선진화 자원관리 체계 구축 (첨단 정보화기술 적용·확산)
 - RFID/USN 활용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
 - 순환골재 관리체계 구축
 - 음식물폐기물 관리기반 구축
- ③ 성장동력 강화 (수요기반 확충 및 인프라 구축)
 -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수요확대
 - 보상보험제도, 온라인판매 활성화, 물류지원 등

- 자원순환 종합홍보관 설치 및 대국민 의식 함양
-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
- 자원특화단지 조성 및 확대
- 영농폐기물 우수기술 실용화 지원
- 일회용기저귀, 농약빈병 처리시설 설치
- ④ 질적 고도화 (경쟁력 강화)
 - 금융·세제지원 확대 등 경영안정화
 - 실용화 기술개발 및 정보의 보급 촉진
 -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지원
 -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사업
- ⑤ 신규 유망분야 발굴·육성
 - 친환경에너지 개발·보급 지원

2.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법 확대

- 재활용산업육성자금 금년도예산(700억원)이 1월중에 승인완료 되는 등 융자금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증액 방안을 강구
- 고객경영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찾아가는 용자 행정서비스를 고객접점지역인 지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융자금 조기자원 유도
- 예측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해 용자접수부터 승인·대여까지 실시간 알림서비스 실시
- 재활용품 선별량 확대를 위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·지원
 - 3개 시·군(통영, 김해, 서천)의 재활용품 집하·선별시설의 신축, 이전, 확장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
-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
 - 영세하고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업체를 집단화하여 단지내 물류시설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및 경쟁력 제공
 - 전주시(2만4천평)를 우선 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단지조성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지속적 확대를 위한 중·장기 추진방안 마련(2006년 12월)
- 환경부내 유일한 정부승인 통계작성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폐기물관련 모든 통계생성 및 제공 체계 구축
 - 통계작성건수를 현 5건에서 환경산업통계조사, 전

국폐기물통계조사, 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등 3건을 추가한 8건으로 확대하고 신뢰성을 확보

3.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험·검사기능 강화

- 재활용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자원순환센터 설치
- 기술개발여건이 미흡한 영세재활용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실용화,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및 보급기능 강화
- 재활용업체의 현장애로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지도 등 지원사업 확대
- 시험·검사업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
- 플라스틱 재질용기, 필름류와 신규소각·매립시설에 대한 시험·검사수요 대폭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검사장비 구비 및 전문인력 육성
- 폐의약품, 유기성오니 등 유해폐기물에 대한 유해성평가 및 적정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
- 지자체별 폐기물 최적처리를 통해 발생량 절감 및 자원회수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컨설팅 실시
- 지자체별로 폐기물 발생량·종류 등 폐기물처리 여건이 상이한 반면 전문성과 경험부족 등으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처리방법을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개선
-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착수
-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생산된 퇴비, 사료 등의 재활용확대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전국 처리시설(255개소)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(2005.12.31, 폐기물관리법에 검사기관으로 지정)
-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감소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

목표 3. 폐기물관리 제도운영 효율성 강화 및 정착

1. 폐기물발생 최소화를 위한 감량화정책 강화

- 폐기물의 근원적 저감을 위한 사업장폐기물감량화 제도 기능 확대

- 고무 및 플라스틱업종 등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8개 업종에 대한 감량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대상 업종 확대
- 생산공정에 대한 정밀진단 및 생산단계별 물질수지분석 등을 통해 감량화 가이드북, CD 등을 제작·보급하고 실시간 교육이 가능한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- 감량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감량화 기술능력 배양 및 현장애로기술 해소
- 폐기물발생원 감축을 위한 공정개선, 재활용회수체계, 적정처리방법 등 폐기물처리방법 전반에 대한 현장무료 컨설팅 실시
-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제도개선을 통한 지속적 운영 효율화
- 부과기준에 대한 형평성,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원 및 대상자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도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
- 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 비용으로 현실화
- 재질이 다양한 플라스틱품목에 대한 부담금 부과단계를 원료에서 최종제품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사항에 대한 법률개정 추진(2006년 6월)

2. 생산자책임주도의 재활용체계 정착

- EPR제도 대상품목 확대 및 운영효과 제고
-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대상품목 확대
- 2005년 18개 품목에서 2006년도에는 21개 품목으로 확대(프린터, 복사기, 팩시밀리 추가)
- 알카리망간전지 등 재활용 필요성이 있는 품목까지 대상품목 확대방안 강구
- 그간의 제도운영결과 의무생산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재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
- 선진국의 적용사례조사 및 국내적용 가능성 분석 등을 통해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·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(2006년 2~7월)
- 분리수거실적이 부진한 형광등·필름형포장재와 최종수요처가 제한된 타이어 등의 재활용률 제고방안 마련(2006년 10월)

- 제도의 종합개선대책 및 발전방안마련을 위해 환경부, 지자체, 전문가, 의무생산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제도시행 3년 성과평가회 개최(2006년 7월)
- 열적재활용 확대를 위한 에너지 회수활성화 지원
 - 복합폐플라스틱, 필름포장재 등 기술·경제적으로 물질재활용이 어려운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에너지로 회수하여 자원이용을 확대
- 에너지 회수 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활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
- 물질재활용 기반이 미흡한 남은 음식물, 하수슬러지, 유기성폐기물고형연료(RDF) 등에 대한 에너지 회수 다양화 방안 강구

3. 폐기물적정처리유도를 위한 관리대상 확대 및 기반 강화

-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참여율 확대 및 운영효율성 제고
 - 시스템 참여율 제고를 위해 고객중심의 교육을 다양화하고 상시 정보제공체계 구축
- 2005년부터 시범대상자 대폭확대에 따라 환경보전협회 등 법적교육기관의 협조를 통해 교육과정을 상설화하고 오류인계내역 등에 대한휴대폰 문자메시지(SMS)전송서비스 실시
- 지정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유해성이 높은 감염성 폐기물에 대하여는 시스템 사용 법적의무화를 추진(2005.3.4)
- 건설폐기물의 재활용활성화 및 적정처리를 위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본격 가동(2006년 1월)
 - 건설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통합관리, 순환골재의 수요·공급활성화, 각종 행정서류의 온라인처리 기반제공
 - 시스템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(GIS)을 구축하여 관련 통계 등 각종데이터를 신속하게 생성 및 제공
- RFID를 기반으로한 감염성 폐기물관리시스템 구축
 - 감염성폐기물의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완료(2006

년 12월)

- 정보통신부에 2006년도 IT839 전략에 의한 'RFID 적용 본사업'에 추진과제로 공모(2006년 1월)

목표 4. 재활용가능자원의 자원화 확대

1. 재활용사업의 중·장기 발전전략 수립

- 영농폐기물 수거·처리 사업의 중·장기 발전대책 마련
 - 공공성 위주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원가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통해 공공성과 생산성이 함께 향상될 수 있는 방안 마련
- 전국 60개 사업소의 역할과 기능을 주변여건변화에 맞게 재정립하고 인건비, 차량비 등 수거·처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
- 농약플라스틱용기 사용률 증가에 따른 적정 재활용 방안 마련
- 매년 유리병재질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됨에 따라 2004년 현재 플라스틱용기가 94% 점유
- 재활용여건이 미흡한 폐기물에 대한 회수·이용률 확대방안 마련
 - 재활용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활용가능 자원의 유통체계를 분석하여 회수·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유효자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
-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확대방안 마련
 - 건설폐기물, 포장재, 소각재, 하수슬러지 등의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재활용 확대방안 강구

2.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통한 수거 효율화

- 민간위탁 수거사업 확대 실시
 - 연간 1,000톤 이상의 폐비닐수거가 가능한 37개 시·군에 대한 수거 희망자(33명) 공모를 통해 200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결과를 통해 폐비닐 전량수거 방안으로 확대
- 농민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영농폐비닐의 수거량 확대



- 폐비닐 다량발생 시기에 무단방치 방지 및 적기수거를 위한 폐자원 집중수거 운동을 전개하고 재질·색상별 분리배출 활성화 유도
- 47천톤(1998) → 130천톤(2003) → 170천톤(2005) → 180천톤(2006)

3. 적체된 폐비닐의 5년내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지속 추진

- 민간분야의 다양한 폐비닐 처리기술 공모
 - 2005년 5개 민간사업자에서 15개 사업자로 확대
- 민원발생, 도로편입, 부지협소 등으로 폐비닐의 재고처리가 시급한 사업소와 수요처가 부족한 저급폐비닐을 우선 처리
- 경북봉화에 년 12천톤 처리규모의 중간가공시설 신규가동(2006년 8월)
- 합성수지원료 수요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중국, 말레이시아,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로 수출을 확대
 - 해외사무소를 적극 활용한 현지 수출조건 파악 및 현지수요처 확대

마 무 리

- 2007년부터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여 제품의 환경성

이 강화된 각종 국제협약들이 시행

- 각종 정책 및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되면서 제품의 생산단계부터 폐기물발생 등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 제품의 전생애 주기에 걸친 순환형 자원관리체계 구축은 필수 요인
- 이를 위해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핵심기능을 강화하여 폐기물의 순환형 관리체계 구축에 노력
- 건설폐기물, 전기·전자제품 등 발생량이 많고 환경유해성이 높아 특별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 및 적정처리를 위한 신규제도 도입에 중심역할을 수행하고
- 폐기물적법처리제도, EPR제도,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등 각종 폐기물관리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모든 폐기물의 발생단계부터 최종처리까지 전과정 통합관리체계를 구축
- 지속적인 기능혁신과 조직체질 개선노력을 통해 국가 폐기물제도 전담기관으로서 경쟁력이 높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사 위상 확립
- 핵심기능 중심으로 공공성, 효율성, 생산성이 높은 사업구조를 실현하고 조직원의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폐기물관리 기능일원화 방침에 차질 없이 대응